

제5차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2월 정기) 녹취록

| | |
|------|---------------------------------|
| 회의명 | 제5차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
| 일시장소 | '22. 2. 21(월) 14:00~15:50, 화상회의 |
| 참석자 |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부의안건 해당 과·계장 |
| 부의안건 | 도경찰청 보고 5건, 위원회 보고 2건, 심의안건 5건 |

위원회 개회

위원장)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2월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관계로 화상회의로 변경하고 되었습니다. 도경찰청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도경찰청 보고 5건, 위원회 보고 2건, 심의안건 진행하겠습니다.

도경찰청 보고(5건)

주민밀착형 자치경찰 -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

지자체 CCTV 통합관제 센터 운영 내실화 방안 공유 -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

20대 대선(3.9) 관련 총포·화약류 안전관리 강화 -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스토킹 잠정조치 등 현장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

교통 분야 주요 추진 사항 - 교통과 교통안전계

위원회 보고(2건)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조직 개편 - 자치경찰총괄과 자치경찰담당

2022년 경남경찰 주요업무 계획 - 자치경찰정책과 경찰정책담당

심의안건(2건)

(제9호)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위원장) 안건 제9호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 일부 개정 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과장)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안전 제9호,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 일부 개정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4차 회의에서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경찰법에 따라 구성된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발언 내용 등을 회의록에 기록하기에는 서식상의 한계가 있어,

회의록과 별도로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고, 작성된 회의록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영구보존 할 필요가 있어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회의록 작성·관리 2항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올해 상반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경상남도기록원에서 수요 조사 후 우리 위원회의 회의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가 되도록 조치 예정으로,

이에,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 제11조 ②항 중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를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한다.”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분들 질문 바랍니다.

한규학 위원) 회의기록을 보관하는데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서 일부 개정안을 만들었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원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을 말해 주세요

위원 일동)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 일부 개정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호) 경상남도경찰청 지역·건축물 등에 대한 범죄예방진단 규칙(안)

위원장) 안건 제10호 「경상남도경찰청 지역·건축물 등에 대한 범죄예방진단 규칙」 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장)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우선 안건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경상남도경찰청 지역·건축물 등에 대한 범죄예방진단 규칙」 제정 등 4건에 대한 공통적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인해 법령에 근거하는 경찰청 행정규칙 이외에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행정규칙이 실효됨에 따라,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효된 규칙들을 대체·보완하여 경상남도경찰청 규칙으로 다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각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심사순서에 맞게 순차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회의자료 28쪽, 안건 제10호 「범죄예방진단 규칙」 제정(안)입니다.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규칙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 범죄예방진단 대상, 방법, 고려사항 및 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범죄예방 종합계획 수립,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관리 및 유관기관 협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범죄예방 전문요원 선발·운영 및 그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정기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도 경찰청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친 결과, 범죄예방진단 요청에 대한 판단주체 및 절차, 위원회 의견반영 및 종합계획 수립 보고, 범죄예방강화구역 지정·해제 등 보고의무 등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범죄예방진단 규칙」 제정안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분들 제안설명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분들께서 말씀해주세요, 먼저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신 고규정 위원과 김진혁 위원 의견을 먼저 검토 해 보겠습니다.

고규정 위원께서 제6조 2항에 대해 호가 붙었었는데 조금 구체화 되었는데, 이것은 1항과 중복이 되어 간단하게 수정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제7조 1항의 경우 경찰서장은 전년도 경찰성과와 논제발생 등을 분석하고 해당연도 범죄치안 수요를 예측하여 범죄취약지구 관리, 순찰인력 활용, 방범환경 개선 등이 포함된 경찰서 범죄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경남청장은 경찰서장이 수립한 범죄예방종합계획을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이 부분을 추가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고규정 위원) 제6조 2항에 받았던 자료에서는 제3조 각호에 범죄예방진단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을 열거해 놓고 제6조 2항에 열거되어 있음, 동일한 제3조에 각호에 있는 범죄예방진단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을 칭하는 것인지 다른 사람을 칭하는 것인지 혼선을 줄 수 있는 것 같아 간단히 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최종 안에 제6조 2 항에 제3조 각호를 지칭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지칭하여 잘된 것으로 보임,

다만, 제7조에 경찰서장이 범죄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의견을 제시 하였으나 우리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은 경남청장만이지 일선 서장을 포함할 수 있느냐는 생각에 의견만 낸 것입니다. 경찰서장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범죄예방종합계획을 보고하는 것은 법규정상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7조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경찰서장이 범죄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청장에게 보고하는데 우리 위

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제2항에 경찰청장은 경찰서장으로부터 받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해서 범죄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경찰청장이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만으로 역할과 절차를 다한 것으로 생각해서 경찰서장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지 않아 단계별로 경찰서장이 경찰청장에게 보고, 경찰청장이 위원회에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단순화 한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분께서 말씀 바랍니다.

사무국장) 고규정위원 말씀에 1항에 경찰서장은 범죄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야되지 않느냐는 의견에 공감을 하고, 다만 보고의 주체를 경찰서장으로 하면 경찰법 제28조 3항에 의해 우리 위원회는 경남청장만 지휘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경찰서장으로 보고의 주체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2항에서 경남청장이 서장이 수립한 종합계획을 참고해서 경남청장이 범죄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수립하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보다 1항이 중요합니다. 서장에게는 무조건 수립하게 되어 있어, 1항 후단에 경남청장은 경찰서장이 수립한 범죄예방종합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은 어떨지, 문제없다 생각하여 제안 드립니다.

고규정 위원) 저도 국장님 의견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제7조 1항에 보면 의무적으로 경찰서장이 범죄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하지만, 경찰청장이 보고하는 2항은 임의적 규정이기때문에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이 수립한 종합계획을 참조해서 반드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면 2항이 만족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경찰서장은 경찰청장을 통해 또는 경찰청장은 경찰서장이 수립한 안을 수집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법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수정안에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진혁, 황규학 위원) 동의합니다.

윤창수 위원) 전반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경찰청장을 지휘할수 있는 범위가 자치경찰사무에 한하여로 되어 있는데 종합계획이 전체 업무에 망라되어 있다고

보는데 전체 업무를 보고하여야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지 생각합니다.

위원장) 지역 건축물 등에 대한 범죄예방규칙인데 이 자체가 자치경찰사무로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사무국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과 동일하게 제1조 목적에서 범죄예방이라는 부분을 한정하기에 우려는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규정에 근거해 해석할 때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경찰정책과장) 도경 입장은, 경찰법에 취지한 바가 자치경찰사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거기서 심의의결을 통해, 그것도 도경청장을 통해 지휘감독 하게끔 규정화 되어 있는데, 이원화가 안된 상황에 국가사무도 수행하고 있고, 일선 서장은 자치사무 외 수사 사무도 수행하고 있는 과정에, 법규가 도경청장을 통해 하라고 되어 있는데 범죄예방 부분에 대해 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규정에 대해서도 보고사항, 각종 관리 감독하는 부분에 대한 규정이 명시적으로 계속 이어지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그래서 경찰서장이 위원회에 보고하자는 부분은 뺏습니다. 경찰서장이 청장에게 청장이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보고의 주체가 경남청장이기에 서장으로 받은 종합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기에 도경의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사무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 어떠한 문제든 마찬가지로 자치경찰사무를 벗어나면 청장이 그 부분을 빼고 보고를 하면 됩니다.

한규학 위원) 말씀에 다 일리가 있음, 범죄예방진단규칙이라 하면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고, 생활안전 사무로 국가경찰과 충돌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범죄예방과 범죄 발생 후에 국가경찰과 나뉘지는 것이지, 범죄예방은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여 경찰서장이 청장에게 보고해서 청장이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에 대해 이 규칙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규정 위원) 단서를 만들 때,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사항만 보고하도록 하는 것

도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주열 위원) 경찰청 표준안과 비교해서 범죄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방자치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면 의무사항을 두고 있으면서, 유관기관에는 경상남도를 기준으로 하면 도청, 도지사, 도지사로부터 권한을 받은 자치경찰위원회 등등이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범죄예방종합계획이라는 것은 국가사무, 자치사무 엄격하게 구분을 짓자면 구분이 되겠지만은 국가차원에서 진행해야 되는 사무로 보여 집니다. 제 생각으로는 2항에서 경남청장은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에 범죄예방종합계획 일체를 이야기 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요구하는, 우리 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느낌이 듭니다. 계획을 수립할때도 우리 차원에서도 자치사무와 관련되는 의견개진을 사전에 하던지, 경찰서장이 사전에 의견을 수집하던지 해서 경찰서장 내지는 도청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의견개진에 대해 사실상 어떻게 의견이 반영되었느냐, 다르게 반영이 되었다면 왜 반영이 되지 않았느냐, 더 나아가 범죄예방에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 등등을 우리가 검토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확일적으로 2항처럼 보고를 하여야 한다면 되어 있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치경찰사무에 한정하고 의견개진한 부분에 대해 포함해서 보고를 한다는 지 제한적으로 한다는 것에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주열 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조금 제한하자는 취지가 맞습니까

김주열 위원) 네 그렇습니다.

윤창수 위원) 실무적으로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보고하면 안되겠느냐, 또는 용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런식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공감합니다.

사무국장) 이 안이 국가경찰사무와 연계가 되면 어찌나, 그에 대해 권한이 그쪽까지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이 안은 본청에서 자치경찰사무라고 해서 자치경찰위원회 규칙으로 제정하라는 것이고, 제1조에 범죄예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찰법 제4조에 근거하여 조례가 만들어 졌는데 조례에 지역 주민

안전에 대한 범죄진단 이 부분은 자치경찰사무로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의 명칭도 지역 건축물 등에 대한 범죄예방규칙으로 자치경찰사무로 규정이 된 것으로 혹시 범위가 넘는 부분에 대해 보고하는 주체가 빠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규정에서 목적을 하고 있는 취지에 맞게끔 보고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가경찰사무와 연계가 되지 않느냐고 우려하는 것은 제도와 조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규학 위원) 지금 이 건은 지역 건축물 범죄예방 규칙으로 이 범위(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제목에 의하면 자치경찰사무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본문에도 건축물과 관련해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나 시설진단하는 규칙으로 이 자체가 자치경찰사무를 의미하는 것이라로 저는 봅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자치경찰사무를 다시 한정한다든지 국가경찰사무를 제외한다는 표현은 너무 번잡해진다 생각합니다.

고규정 위원) 제2조 정의에 5호에 범죄예방종합계획이란 문구를 넣어 지역건축물 등과 관련한 범죄예방종합계획을 말한다는 조문을 넣는 것이 어떨까요?

김주열 위원)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제2조 5호를 신설해서 범죄예방종합계획을 구체화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떨까요

김진혁 위원) 범죄 발생 이전이 범죄예방, 이후는 수사영역으로 위원님들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규칙의 제목, 한계라는 부분에서 범죄예방의 부분을 어디까지 봐야하는 것은 제목에서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지금 논의하는 부분은 광범위하게 범죄예방을 외사, 경비 등으로 보아 우려를 하는데 설령 그렇게 갈 가능성은 이 법의 취지와 맞지않다 생각합니다. 광의적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전부 범죄예방에 관한 부분은 행정경찰의 영역으로 자치경찰의 사무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의견입니다. 세분화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윤창수, 한규학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세분 위원분과 원안대로 하자는 사무국장의 의견으로 네분이 동의하였습니다.

고규정 위원) 국가사무와 관련되는 또는 대테러 등 계획도 있거나 하는 경우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우려된다면 명확하게 하는 필요에 정의란에 하느 두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그렇다면 제7조 1항 제2문에 “이 경우 경남청장은 경찰서장이 수립한 범죄예방종합계획을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이 경우 자치경찰사무에 관하여 경남청장은 경찰서장이 수립한 범죄예방종합계획을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 하는 것 “자치경찰사무에 관하여” 를 첨부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러면 국가경찰사무가 제외 됩니다. 정의를 구분하려면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기에 자치경찰사무에 한해서만 보고하라는 취지가 됩니다.

사무국장) “범죄예방종합계획(국가경찰사무 제외)” 또는 “보고(국가경찰사무 제외)” 는 어떨까요

위원장) “범죄예방종합계획(국가경찰사무 제외)” 이러면 간단할 거 같습니다.

위원 일동)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건 제10호 「경상남도경찰청 지역·건축물 등에 대한 범죄예방진단 규칙」안의 경우 본안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제7조 1항 후단을 수정하는 것인데 “이 경우 경남청장은 경찰서장이 수립한 범죄예방종합계획(국가경찰사무 제외)을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여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견이 있으신분 있으십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혁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의견이 더 있습니다. 제6제 2항 “경남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중략) 서면으로 교부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교부한다” 로 의무규정화 한다는 것의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이 의견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수정하기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 1항에 김진혁 위원께서 단서 조항을 “단,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 현황 등 관련정보나 현황 등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를 신설하였으면 어떠한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김진혁 일동) 공표금지조항을 넣자는 말인데 이 부분들이 악의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하락, 민심저하 등.. 실무적으로 안에서 알면되지 공표될 경우 악의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에 공표금지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 드렸습니다.

정책과장) 예방활동에 전력하는 과정에 기본적인 데이터, 통계학적 측면을 홍보차원에서 활용하다 보니, 일정·특정 구역이 암묵적으로 표방을 하지만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어느 지점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공공아파트, 특정 학교 등 개념을 넓혀 구나 시단위 지정을 합니다. 강제규정을 해버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라던지, 규칙을 공개하게 되어 있기에 행정행위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되기에 현장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진혁 위원) 행정차원에서 공표를 하지 않는 것이 어떠냐, 미국같은 경우 할렘 지역 등...지금 현재는 어떤가요 셉테드사업을 하다보면 건축물을 바꾸든, 그림을 그리든 자연스럽게 알려지는데 이부분이 범죄취약지역이라고 공표를 하지는 않지 않는가요

정책과장) 당사자들의 권익도 보호 되어야 겠지만은 경찰이 노출되어 있는 여러

가지 행정행위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절차를 통하든 언론을 통하든 노출이 될 우려가 있기에 행정규칙에 명시적으로 넣었을 경우 각종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행정에 대해 비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우려에 걱정하는 측면입니다. 홍보라는 측면 등과 경제적인 선상에서 위축이 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사무국장) 실무적으로 제한을 해버리면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관리가 범죄가 많이 발생해 문제가 될 수 있고, 선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하면서 언론홍보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제한될 수 있고, 학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가격 하락 등등에 대해 공개를 안하는데 미국, 영국 등은 범죄가 발생한 도로까지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방적 차원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검증을 해보니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논란이 많으나 미국, 영국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요즘 빅데이터 차원에서 데이터분석이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도 있어 고려바랍니다.

김진혁 위원)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했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 철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그렇다면 안건 제10호 「경상남도경찰청 지역·건축물 등에 대한 범죄예방진단 규칙」안은 수정안을 부가하여 통과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제11호) 경상남도경찰청 소년업무 규칙(안)

위원장) 안건 제 11호 「경상남도경찰청 소년업무 규칙」 제정(안)에 대해 정책과장 제안설명 바랍니다.

정책과장) 안건 제 11호 「경상남도경찰청 소년업무 규칙」 제정(안)입니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규칙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 관계기관과의 협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학생 등 대상 범죄예방교육과 교사와 학부모 등 대상 범죄예방설명회 실시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청소년경찰학교 및

명예경찰소년소녀단,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비행소년 조사, 피해자·신고자 보호 등 조치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는 소년범 재범 방지를 위한 경찰선도제도로써 선도심사위원회, 선도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정기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도경찰청과 수차례 실무회의를 거친 결과 학교폭력 주변인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실시, 학교폭력 조기진단 등 사전예방활동, 선도심사위원 연임제한 등 수정보완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경상남도경찰청 소년업무 규칙」 제정 안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분들 제안설명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난번 회의에서 지적된 사항이 수정되었습니다.

고규정 위원)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찬성합니다.

위원 일동) 동의합니다.

고규정 위원) 안건 3호 경상남도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규칙에 경과규정을 두는 것을 제시하였는데 이미 시행하고 있어 부칙으로 두었으면 좋겠다고 제시를 했는데 이 소년업무 규칙에 대해서도 종전규정에 대해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었다면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도심사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도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보기에 그렇다면 안건 이후에도 같은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그렇다면 안건 제11호 「경상남도경찰청 소년업무 규칙」 제정(안)에 대해 부칙에 “경과조치”를 신설토록 추가형 통과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제12호) 경상남도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규칙(안)

위원장) 안건 제12호 「경상남도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규칙」 안을 상정하여 심

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장) 안건 제12호 「경상남도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규칙」 제정(안)입니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규칙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는 아동안전지킴이의 위촉 및 해촉,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및 결격사유 등 아동안전지킴이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는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시 복무 원칙과 근무지 및 근무 방법, 교육 등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는 활동비 지급 및 보험 가입 등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정기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도경찰청과 수차례 실무회의를 거친 결과 아동안전지킴이 보호대상 규정, 운영계획 수립 및 보고 의무, 선발위 외부위원 범위 명문화 등 내용을 수정하여 안건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분들 제안설명에 대해 의견이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정 위원) 제8조 아동안전지킴이 선발심사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외부위원을 적극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만 되어 있고, 혹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내외부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외부 인원의 정수를 1/3정도로 외부위원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폭을 두는 것이 어떻나 싶습니다.

학규학 위원) 고규정 위원 의견에 찬성합니다. 외부위원 40% 찬성합니다. 선발심사위원회가 서장을 위원장으로 경찰서 과계장이 참석합니다. 외부위원을 둘려고 하면 40%면, 6명이 되어 많지 않습니다.

윤창수 위원) 40% 6인 정도 동의합니다.

김주열 위원) 외부위원 수에 동의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외부위원 자체가 무리없이 이루어 질 수 있다면 프로테이지는 절반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외부위원을 초빙하는 것이 어렵다면 규정을 두고 나중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비난 개연성도 있어 실무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거기 비추어 1/3에서 절반정도 탄력적으로 실무적으로 결정하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고규정 위원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진혁 위원) 동의합니다. 1/3이상으로 한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냐는 의견입니다.

사무국장) 저도 최대 40%까지 찬성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만약에 한다면 조문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본문에서 빼내 단서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여 외부위원의 수를 40%까지 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창수 위원) 김진혁 위원말씀처럼 1/3 이상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1/3이상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님 실무차원에서 예산부족 문제가 있다고요?

사무국장) 모자란다고 보다는 위원들 수당에 대해 책정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서로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8조에 외부위원을 1/3이상으로 한다고 하고, 다만 예산안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로 실무진에 맞춰주면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그럼 1/3이상으로 하기로 하고 예산관련은 단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까
안전 제12호「경상남도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규칙」제정(안) 대로 가결토록 선포하겠습니다

(제13호) 경상남도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안)

위원장) 안건 제13호 「경상남도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 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장) 안건 제13호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정(안)입니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규칙 제정목적과 적용대상 및 범위,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단속경찰관의 임무, 복장 및 휴대품, 안전조치 및 단속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26조까지는 통고처분, 범칙금 및 과태료, 통고처분 후속조치 및 통고서 재발부, 이의신청, 즉심청구 및 체납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부터 제35조까지는 주취운전자 적발 및 단속, 음주스티커 발급, 음주측정기 비치 및 사용관리, 시험 및 소독, 음주측정 요령, 후속조치 및 측정결과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6조부터 제49조까지는 무인교통단속장비 관리요원, 설치·관리 및 검사, 위반차량 처리, 통고처분 및 과태료, 단속 및 안전 확보, 경고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0조부터 제58조까지는 공익신고 접수 및 관할, 이첩 및 조정, 사실확인 및 종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정안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분들 제안설명에 대해 의견이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학 위원) 이 지침이 경찰청에 교통단속 처리지침이 잘되어 있다고 보는데, 주요내용 중 주취운전자 단속을 할때는 3인이상 합동 단속을 한다. 다만 여건상

2인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경찰청 안 그대로 딴 것이지요?

정책과장) 경찰청 안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한규학 위원) 야간 음주단속은 2명이 할 수 없거든요, 경찰청 안이라니 동의합니다.

고규정 위원) 제17조 이의신청 규정이 있습니다.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는 것인데, 행정처분에 관해 이의를 하면 처분일로부터 10일로 하면 10일이 지난 후에 받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의를 하는 계산을 처분일로 부터하는 경우가 이례적이라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진혁 위원) 처분일로부터 10일이내가 너무 짧다고 이해가 되는데, 10일이 짧다면 실무적으로 가능하다면 처분일로부터 20일 혹은 15일로 늘리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한규학 위원) 고규정 위원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이 상황이 경상남도자치경찰 위원회에서만 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경남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고규정 위원) 통고처분을 할 때 우편으로 통지만 오고, 일반 법원 등기우편처럼 수령일을 적지 않는데 실무상으로 어려울거 같아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경남위원회만 독자적으로 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경찰청에 건의안을 올리는 것은 어떨까요

위원장) 협의보다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 이런 것이 있었다, 10일에서 20일 정도로 확대해 달라는 우리 위원회의 안이라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나올 거 같습니다.

정책과장) 본청단위와 협의하여 규칙개정안에서 대외효과를 낼수 있다는 전제하에 시일을 늘릴 수 있도록 의견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그러면 제안을 철회를 하셨기에 더 이상 검토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의견이 없으면 안건 제13호 「경상남도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통과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일동) 동의합니다.

위원장) 화상회의로 긴 시간 참여해주신데 감사말씀 드립니다. 추가로 다음주 월요일 2. 28.에도 인사관련 임시회의를 한번 더 개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내어 주셔서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